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8년 10월 2일(목)에 배포되었습니다.

“가족돌봄의 위기, 한국의 돌봄정책 해법은?”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8년 10월 1일(수)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9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저출산 ·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12:3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돌봄정책연구팀
-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제심포지엄 개요

-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문제를 선도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0월 9일 목요일 『저출산 ·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본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마련되었음. 당일 국내외 발표자 4명과 토론자 8명, 돌봄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 등 100여명의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것임.

□ 저출산 ·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가족돌봄의 위기

-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임. 2005년에 이미 초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오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돌봄정책과 지원 현황

- 이에 한국은 범정부적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육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인력 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EU 및 OECD 국가의 돌봄정책 추진 경험을 살펴 보고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돌봄정책의 방향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심포지엄을 통해 본 유럽연합의 돌봄정책 사례

- 심포지엄의 전반부에서는 로버트 앤더슨 박사(유럽재단, 아일랜드)가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함.
- 유럽연합은 200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한명을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4명이 부양하고 있는 반면, 2060년에는 이 비율이 2대 1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연합 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 서베이(Eurobarometer survey, 2007년)결과, 조사 대상 세 명중 한명 이상이 지난 10년 간 타인의 정기적 도움과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주위에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음(Eurobarometer, 2007).
- 또 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능하신 고령의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세 명중 한명 비율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음.
- 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이 이런 분들은 집에서 공공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27%),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음(24%). 사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보는 것이 두 번째로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었음(34%). 사립 요양원은 유럽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유럽연합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임.

- 이러한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돌봄노동인력 수급 관련 정책과 더불어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는 가족내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이 유럽연합의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클레어 카메론 박사(런던대학 토마스코람연구단, 영국)는 “유럽 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이 발표는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시장 현실과 구조를 비교하고 돌봄노동력 관련 고용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결과임.

□ 심포지엄을 통해 본 한국돌봄정책의 향후 방향

- 심포지엄의 후반부에서는 타냐 벨리 사회복지사(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 미국)가 “미국의 장애인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장혜경 선임연구위원(김영란 전문연구원 공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이 “한국의 돌봄정책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본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족돌봄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하루 돌봄시간에서 노인돌봄자는 12시간 54분, 장애아동 어머니는 13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등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공식영역의 돌봄노동자의 경우도 40대 이상 저학력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며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향후 돌봄정책관련 과제는 첫째, 공식돌봄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

인 돌봄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둘째, 공식돌봄서비스 제도화가 일과 돌봄책임의 양립을 위한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함.

□ 돌봄정책의 이슈화와 사회적 환기 기대

- 이번 심포지엄은 3개국의 관련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EU 및 OECD국가들의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임.
- 또한 한국의 돌봄정책 방향과 내용을 되짚어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한국의 경우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 인력 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어 본 심포지엄을 통한 여론 환기가 크게 기대됨.

별첨 1. 발표자 프로필

1. 로버트 앤더슨 박사



□ 유럽연합의 정책자문 산하기관인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내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단장’ 이다.

□ 박사는 현재 유럽연합의 생활환경과 삶의 모니터링, 돌봄서비스 관련 프로젝트,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앤더슨 박사의 연구들은 생애전반에 걸친 일·가정생활 양립관련 이슈와 특히 여성들이 가족 내 의존적 성인 및 노년층 돌봄과 자신의 취업을 조화 시키는 방안들에 주목하는 동시에, 노동인력 구성의 변화와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화

사이의 연결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만성질환과 가족돌봄에 관한 것* 등이 있다.

2. 클레어 카메론 박사



□ 런던대학교의 토마스 코람 연구단의 연구관이다.

□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비교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돌봄노동 양상 및 그 속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과 이런 돌봄노동을 뒷받침하는 돌봄정책체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사회적 교육(social pedagogy)’ 개념을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저서는 공저로서 *보육원의 남성노동자: 젠더와 돌봄노동, 유럽에서의 돌봄노동: 현황과 향후방안* 등이다.

3. 타나 넬리 사회복지사



-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의 서비스관리자이다.
- 동 시설에서 서비스코디네이터, 서비스관리전문가, 지역돌봄서비스와 돌봄지원 관리자/감독관, 돌봄서비스의 소비자지원서비스국장 대리 등을 역임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돌봄서비스의 질 유지와 이들의 독립성, 선택권을 증진하는 돌봄지원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돌봄서비스 안내서(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의 돌봄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와 실제 서비스발견을 위한 안내서) 지역돌봄서비스와 지원제도의 기능 등이 있다.

4.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김영란 전문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 두 연구원은 돌봄노동 연구 시리즈로서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2005),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2006), 공식영역의 돌봄노동실태조사(2007)등을 수행하였다. 2008년 현재 타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로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의 제도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별첨 2. 발표 요약문

1. 로버트 앤더슨 박사의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정책”

- 고령화와 같은 유럽 내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합차원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노동력 유지와 연금개혁 이슈들과 연관해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유럽 연합의 정책적 대응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와 돌봄체계들에 대한 관심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돌봄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사적인 측면으로 여겨지던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돌봄책임에 대하여 점차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고령화와 장기돌봄, 그리고 아동 및 보육과 관련한 정책 개혁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많은 유럽연합 가입국들 내에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다루는 복지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누가 이 서비스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지역공동체와 가족이 이 일을 맡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현실은 이런 선호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규 돌봄 서비스는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족 내 돌봄 제공자들의 수는 장차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 돌봄 관련 기관들은 사회적 돌봄 분야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은 직원들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유럽연합 가입국들 내에서 가족 내 돌봄 제공자들 지원 정책 도입과 발전에 관한 논의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돌봄 노동 지원정책의 효과 여부는 정규 돌봄 서비스 영역과 비정규 돌봄 서비스영역간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달려있다.

2. 클레어 카메론 박사의 “유럽 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안”

□ 본 발표문은 유럽연합 6개국의 돌봄 서비스 고용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 5차 연구지원프로그램(5th framework programme)의 지원으로 실시된 4개년 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 본 발표문은 먼저 ‘돌봄 노동’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였다. 동 연구의 조사결과는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랐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6개국 중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노년층 돌봄 서비스와 돌봄노동에 대한 정책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두 영역과 관련된 정책들의 발전상황을 개관했다. 그리고 연구의 전체는 돌봄노동의 이해를 위해 선택한 중점 관심 대상은 유아, 노년층, 그리고 중증 장애인 그룹이었으나 본 발표에서는 유아 돌봄노동과 노년층 돌봄노동과 관련한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상정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적절한 자질들은 무엇인가를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질문들을 살펴보았다.

3. 타나 넬리의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정책 발전”

□ 본 발표는 랜터만 발달장애 서비스 법(the 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의 짧은 역사에 관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랜터만 법에 따라 주 전체적으로 관련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개소의 지역서비스기관을 설립했다. 또한, 미국의 장애인 법은 국민들이 장애인들의 권리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요구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자존감, 자기의존감을 고취시키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국 내에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발달장애를 가진 각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를 맞추기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하나의 돌봄체계가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자격조건이 확대되었다.

□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Alta California Regional Center, ACRC)는 캘리포니아에 산재한 21개의 지역돌봄센터 중의 한 곳이다. 이 센터의 구조와 정책의 현

장 적용 사례는 주 당국의 규제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돌봄서비스 망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줄 것이다.

4.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김영란 전문연구원의 “한국의 돌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 ☐ 본 발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돌봄노동 연구 시리즈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돌봄노동 실태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 ☐ 한국의 돌봄노동 실태를 우선 가족내 영역에서 살펴보면 가족돌봄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하루 돌봄시간은 노인돌봄자는 12시간 54분, 장애아동 어머니는 13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등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영역의 돌봄노동자 또한 여성이 다수이며 40대이상 연령층이 다수이며 학력수준도 낮은 편이며 임금도 매우 낮아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은 초저출산국가로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라로 돌봄수요의 증가와 공식 돌봄 공급의 부족함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화 되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노인돌보미지원서비스, 장애아돌보미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공식돌봄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 한국에서의 향후 돌봄정책관련 과제는 첫째, 공식돌봄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공식돌봄서비스 제도화가 일과 돌봄책임의 양립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별첨 3. 프로그램

12:30-13:20 등 록

13:20-13:30 개회식

사 회 : 김영란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개회사 : 김태현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0-15:30 발표 및 토론

사 회 : 김혜영 가족연구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 1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

로버트 앤더슨 박사 (유럽재단, 아일랜드)

토론

최은영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 2

유럽 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

클레어 카메론 박사 (런던대학 토마스코람연구단, 영국)

토론

박영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민현주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

15:30-15:40 휴 식

15:40-17:40 발표 및 토론

발표 3

미국의 장애인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

타냐 넬리 사회복지사 (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 미국)

토론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용찬 사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4

한국의 돌봄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토 론

정경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17:4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